

 <b>인천광역시</b>	<b>보도자료</b>		시민이 <b>행복한</b> 세계 <b>초일류</b> 도시 <b>인천</b>
	배포일자	2023년 9월 11일(월) 총 2매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김민교 ☎440-3881 최고은 ☎440-388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교통문제, 인천·서울·경기 함께 풀어야 할 숙제**

- ‘수도권 3자협의체’ 운영을 통한 대중교통시책 추진 필요 -  
 - 가계 부담,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이 효과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 시내·지하철 시내 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 정기권’을 내년 1~5월 시범 운영 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인천시는 서울시의 ‘통합환승 정기권’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방적 통합환승 정기권 시행 발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수도권 교통문제는 인천·서울·경기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일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과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공동 대응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분석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버스는

이용이 불가하며, 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지하철 탑승도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서울·경기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국비·지방비를 공동으로 투입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 사업이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통합환승 정기권 추진 여부는 수도권 3자 협의체를 통해 K-패스 제도와의 중복문제 해소, 추가 소요 예산 등을 논의해 공동으로 협의함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K-패스 사업은 지하철과 버스를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의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알뜰교통카드보다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